남구의회, 사무국 의정·홍보 예산 '싹둑'…직원들 '당혹'

의회운영위, 2억7천여만원 중 활동 지원비 등 70%가량 삭감

"긴축 차원" 불구 "주민 알권리 침해" 지적…오늘 예결위 확정

광주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국의 '의정·홍보' 관련 예산 70% 가량을 삭감해 소속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정현안 및 의정활동 대민홍보 등의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주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구의회 사무국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 사무국은 의정과 홍보 관련 세부 사업 예산으로 ▲의회경비 지원(1억7천945만원) ▲의정활동 지원(4천380만원) ▲의정활동 홍보지원(5천550만원) 등 총 2억7천875만원을 세웠다.

이 중 의회경비 지원은 9천53만5천원이, 나머지 두 세부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의 비율은 제출액의 68.1% 수준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다수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창수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전 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회는 예외냐"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경비 지원에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나 '국제화여비' 등 자신들에게 사용되는 금액도 전부 없앴다.

또 의장 표창 상패 제작이나 축기 및 근조기 제작 등 '낭비'라고 비춰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0원'으로 심의했다.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의정현안 대민홍보, 의정활동 주민홍보 등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의회 사무국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긴축 재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 정도의 감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까지 없앴다는 건 사실상 해당 사업을 폐기하라는 취지다. 이는 곧 의정활동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말과도 합치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회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 기회가 부여됐을 때 의회 사무국장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부라도 고려해달라'고 했음에도 '(긴축 재정이) 좋은 의도니 받아들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따르라는 말로 느껴져 무력감이 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현상이 개인 감정이 섞인 데 따른 촌극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A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홍보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나, 의장파와 반의장파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결로 인해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일부 의회 공무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기존 사무국 홍보 활동이 미진했다면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의원들 역할일텐데, 의원들 간 감정 싸움으로 사무국의 손발을 묶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남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8일 최종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계엄군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배 승소

광주지법 "80대 A씨에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주문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17일 A(8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었다.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하던 그는 1980년 5월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다.

계엄군은 시민군 차량에 올라 깃발을 들고 저항한 그를 '불순분자'로 낙인찍었고, 당시 경찰서로 끌려간 A씨는 조사다운 조사도 받지 못하고 육군 31사단과 강원도 군부대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노역에 시달렸다.

삼청교육대에서 A씨는 소대장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매질을 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얼음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삼청교육대에서 벗어나도 계엄의 망령은 평생 그의 뒤를 쫓아 다녔다.

40여년이 지난 뒤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의 도움으로 44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승소 판결에 "계엄을 선포한 이들의 잘못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움직일 수도 없고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떨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한 시설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다. /안재영 기자

"쌀 포대로 사랑 나눠요" 연말연시를 맞아 17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기탁한 쌀(10kg·280포)을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김애리 기자

'식중독 의심' 광주 초등생 76명으로 늘어

5명 입원…일부선 노로바이러스 검출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초등학생이 대폭 늘고 있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지역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76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76명 중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조사에 나선 보건 당국은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들에게서 검체를 채취했다. 또 보존식 등 검체 30건을 수거해 분석에 나섰다.

아울러 학교 측에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무자본 갭투자' 60억대 전세사기 50대 '징역 10년'

법원, 공범 8명엔 징역·벌금형 선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다 60억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함께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타인 명의로 소유한 64채의 아파트 등을 64명에게 임대해 주고 전세 보증금 6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러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감당하다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친구 母 명의 도용 뺑소니 합의금 마련한 10대 '징역 10개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기 행각까지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4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A군은 친구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현금화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파크골프 2급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수시 / 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 (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 (실내 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 파크 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